

농업보조금 개편…전남 농가 직격탄

[종합·해설]

1.5ha 이하 영세농 7만가구 국고보조금 폐지·축소땐 고사

정부가 농업 보조금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함에 따라 농도(農道) 전남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남의 경우 영세 자급농업이 중심인 만큼 보조금 축소·폐지가 이뤄질 경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자생력 낮아 농사 포기 속출 우려

“경쟁력만이 능사 아니다” 반발

◇전남 농업, 소득 낮고 영세농 중심=현재 전남지역 농가는 19만 가구에 45만 명에 이른다.

전남도 인구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경지면적은 전국 175만7천ha의 17.7%인 31만1천ha다.

가구당 면적은 1.5ha로 전국 평균 1.45ha보다 높은 편이다. 이 중 평균 1.5ha도 못 되는 경지를 갖고 농사를 짓는 농가는 6만9천 가구로 37%나 된다. 10명 중 3~4명이 사실상 영세 자급 농가로 볼 수 있는 셈이다.

이처럼 농가와 경지면적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지만 농가소득은 가구당 2천754만여원으로 전국 평균 3천196만여원에 크게 못 미친다. 9개 도(道)중에서 농가소득은 8

위로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다. 농가부채도 가구당 2천934만여원으로 5조5천500억원에 달하고 있고, 전국에서 5위로 높은 농가부채를 안고 있다. 이 때문에 갑작스럽게 농업 보조금을 줄이거나 없앨 경우 영세 농가들은 농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일 우려가 크다.

◇자주 재원 없어 농가 큰 타격=전남도의 경우 지난해 농가에게 지급한 보조금은 240개 제도에 7천140억원에 이른다. 이 중 가장 많이 지급된 보조금은 쌀 소득보전직불금으로 1천440억원이 지원됐다. 작년에는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고통받고 있는 농민들에게 1천57만t의 비료(45억9천만원)가 지원되기도 했다. 농기계 보조금

도 2천860명에게 143억원이 지원됐다.

이는 모두가 국가 보조금이다. 따라서 국고 보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남도에서는 앉아서 일부 영세 농가들이 시들어가는 상황을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대상이나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매년 7천억원이 넘는 보조금이 갑자기 중단되거나 축소된다면 아직 생산성 및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영세 농가들은 농사를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농민 피해와 반발 예상=정부의 이번 방침은 그동안 농민보호 정책에서 경쟁력 강화 정책 쪽으로 방향을 급선회 한 만큼 아직 경쟁력과 생산성 향상을 갖추지 못한 영세 농민들을 고사(枯死)시킬 수 있는 우려를 갖고 있다. 따라서 농민 피해와 반발이 예상된다.

농민들 입장에선 영농 및 생활의 토대 역할을 해오던 정부 지원금이 농업 기반시설 등으로 흘러가면 결국 소득이 줄어드는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여수공항 민영화 ‘없던 일로’

국토해양부 청주공항 한 곳만 선정

공항 선진화 방안으로 추진하던 운 영권 민간 매각 공항으로 청주공항이 선정됐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 민간 매각공항 후보로 거론돼 2012 세계박람회 운영 등에 차질이 우려되던 여수공항은 앞으로 현 체제로 운영된다.

국토해양부는 5일 한국공항공사에서 독점 운영하던 14개 지방공항 중 민간에 운영권을 맡길 대상으로 청주 국제공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민간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해, 효율성과 수익성 개선 효과는 크고 공익성이 침해 가능성에 낮은 공항을 선정하는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청주공항은 현재 적자를 내고 있지만, 항공 수요가 늘어 성장 가능성이 크고, 과도한 인건비 때문에 비효율성이 커서 민간 운영을 통한 효율성 개선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됐다.

국토해양부는 “청주공항은 항공

교통 의존도가 낮아 공항이 갖는 공익성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안정성과 이용 편의성은 우수해 전체적으로 좋은 점수를 받았다”라고 말했다.

국토해양부는 한국공항공사와 함께 매각 추진 전략과 공공성 확보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7월 말까지 전문 컨설팅팀을 마치고, 매각 공고와 우선 협상자 선정 등을 거쳐 내년 초 매각을 완료할 예정이다.

청주공항의 운영권은 매각돼도 공항 시설은 국가 소유로 남는다. 국토해양부는 “공항이용료 인상, 서비스 저하, 시설 방치 등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지만, 통제 장치를 도입해 해결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하계 U대회 실사 한달 앞으로



광주시가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현지실사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함께 시민들의 대회 개최에 대한 열망이 관건으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해 5월2일 금남로에서 열린 2013 U대회 국제대학스포츠 연맹 실사단 환영식.

(광주일보 자료사진)

실속·차별화…유럽 표심 잡는다

■ 광주시 유치 전략

“철저하게 실속·차별화된 전략으로 2015 하계 유니버시아드(이하 U대회) 유치권을 확보하겠다.”

2015 하계 U대회 유치에 나선 광주시의 필승전략이다. 이같은 카드는 언뜻 평범해 보이지만 지난 2013 U대회 실패라는 ‘값진 수업료’를 내고 체득한 최상의 비법이다.

현재 광주시의 경쟁 도시는 6개국 8개 도시. 다만 타이페이, 캐나다 에드먼턴, 브라질 리오, 브라질리아, 폴란드 포즈난, 스페인 비고, 그러니까 등이다. 최종 경쟁국은 오는 13일 국제대학스포츠 연맹(FISU)의 유치신청서 마감 후에 드러난다.

시는 현재까지 대회 유치의향을 표

명한 이들 도시와 경쟁에서 실속을 끌기 위해 외형적인 화려함을 내세우기 보다는 정중동(靜中動) 행보를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 대회 실사 과정에서 무려 25만 명의 시민들이 참여를 이끌어내는 등 유치 열기에선 합격점을 받았지만, 스포츠 인프라 등 대회 개최역량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박광태 시장을 비롯한 U대회 유치위원회의 홍보활동을 철저한 보안에 끌어기로 했다. 여기에는 지난 2013 U대회 해외 유치활동이 외부에 유출되면서 홍보 전략은 물론 FISU 집행위원회와의 접촉 내용 등 중요 정보가 경쟁 도시들에게 흘러들어가 ‘적’을 유리하게 하는 역정보로 둔갑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특히 광주시는 대회 개최지 결정의 관건인 유럽지역 FISU 집행위원회의 표심을 물밀에서 공략한다는 복안이다. 오는 5월 2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FISU총회에서 개최지 결정 표결에 참가하는 집행위원 27명 가운데 절반에 달하는 13명이 유럽 집행 위원이기 때문이다.

다음달 6일~9일까지 진행되는 FISU 실사에서도 광주시는 철저하게 차별화된 전략을 보여줄 방침이다.

시는 FISU 현지실사에서 대형 경기장 신축보다는 기존 시설의 보강과 재활용에 높은 점수가 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2009년 하계 U대회 개최지인 세르비아에서 신규 시설의 건립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 FISU 내부에서는 신규 투자

보다는 기존 시설 활용에 높은 점수를 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신규 시설 건립을 포함해 광주와 나주, 영광 등 전남 인근의 체육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하는 등 실현 가능성 높은 계획을 제시해 광주의 강점을 최대한 부각할 계획이다.

시는 U대회 재도전에 따른 높은 인지도, FISU와의 네트워크와 신뢰, 지난 대회 유치전의 노하우가 강점이지 만, 긴장을 놓지 않고 국제스포츠 마케팅사와 연계해 FISU와 경쟁 도시 정보를 수시로 확보해 전략을 짜고 있다. 또 오는 14일 FISU에 제출해야 할 유치신청서(Bid File)를 면밀히 점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윤영기자 penfoot@

잡세어링 지원에 사내복지기금 3조 투입 내달부터 1년간 한시 시행

잡세어링(일자리 나누기) 기업 근로자의 소득 감소에 대한 생계비 지원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3조 원 이상 투입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이 기금의 일부는 사회 소외계층의 일자리 창출에도 쓰일 전망이다.

5일 기획재정부와 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잡세어링으로 임금이 삐걱된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사

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내달부터 1일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실시한다.

이 방안은 한국노총 등 노조에서도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내달 시행과 동시에 전체 기업으로 확산 속도가 빠를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생계 지원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으며 조만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1983년 도입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 재원 충실했지만, 하지만 경기 침체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근로자에 대한 보상 수준이 급격히 축소되자 누적된 기금 사용을

통해 막아보고자 이번 조치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잡세어링 기업의 근로자는 임금 삭감분의 50%를 소득 공제 받는 것과 더불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일정 부분 소득까지 보전받을 수 있어 수입 감소 폭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연합뉴스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 기원

2009 광주 희망콘서트

3월 28일(토) 오후 7시 / 광주무등경기장(죽구장)

문의 / 062-220-0541 1544-0943